

중산층 규모 추이와 재분배 정책*

윤 자 영**

I. 머리말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속 성장기 이후 중산층이 우리 사회의 성공적 삶의 표상으로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러한 성공적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중산층 워너비의 절망과 불안이 중산층 규모 감소 속도보다 빠르게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중산층에 대한 관심은 빈곤의 증가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무관할 수 없다. 중산층의 개념과 정의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위기는 중산층에만 한정된 위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기라는 상황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산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은 단순히 특정 시점에서의 소득 수준으로만 판단될 수 없고 자산과 집, 교육 수준과 직업, 여가와 문화생활이라는 다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볼 때, 중위소득 50~150%라는 기준은 중산층에 대한 극히 일면적인 모습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일면적인 기준으로도 우리 사회의 중산층은 쪼그라들고 있다.

중산층의 허리를 두껍게 하는 데 재분배 정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처분소득으로 측정된 소득분포는 비교적 불평등한 편이지만, 공적이전 소득과 조세를 통한 정부의 재분배가 개입하기 이전의 시장소득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평등한 편에 속한다. 2011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비중은 재정정책 전에 17.3%였으나, 재정정책 이후에는 15.2%로 나타났다(장지연, 2012).

이 글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1990년 이후의 중산층 규모의 추이를 분석하고 재분배 정책이 중산층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재분배 이

* 이 글은 윤자영 외(2015), 『중산층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ayoungy@kli.re.kr).

전과 이후의 계층의 규모와 이동 파악을 통해 재분배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소득계층 이동, 즉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이동의 동학을 구체적으로 밝혀 재분배 정책을 통한 계층 이동을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속에서 평가하고 재분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II. 연구 자료와 방법

본 연구는 중산층 규모 추이와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1990년도 이후의 시계열 정보를 제공하나 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 도시 2인 이상 가구로 시작하여 이후 농어촌 표본이 추가되었고, 2006년부터 1인 가구를 포함하는 표본이 구축되었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월별 소득과 지출을 단위로 하여 조사한 것으로, 연간소득 자료를 제공하는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한 중산층 규모 추정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기준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표본으로 중산층 규모를 추정했을 때, 가계동향조사는 67.02%, 가계금융·복지조사는 56.52%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가 2010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러한 경향이 일관성 있게 드러날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① 시장소득 1=근로+사업+재산소득
- ② 시장소득 2=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소득(가구간 이전, 할인혜택, 기타 이전소득)
- ③ 경상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 ④ 가처분소득=경상소득-공적비소비지출(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가구소득은 가구균등화 수치(equivalence scale)를 적용하여 가구균등화소득을 도출하였다. 즉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었다.

이 글에서 중산층은 통상적인 중산층 정의를 따라서 중위소득의 50~150%에 속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소득분포를 5분위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2,3,4분위에 속하는 집단을 중산층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이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소득재분배 정책이 중산층 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Mahler et al.(2013)의 방법을 사용했다. 계층 및 소득분위 이동 매트릭스를 통해 재분배 정책이 소득분위 간 이동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중산층 규모를 결정짓는 동학을 분석하였다. 즉 재분배 이전에 부여된 소득분위와 재분배 이후에 새로 갖게 된 소득분위의 변동을 매트릭스로 표시하였다. 중산층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와, 국제비교를 위해 소득 5분위로 분류한 결과를 모두 제시했다.

Ⅲ. 중산층 규모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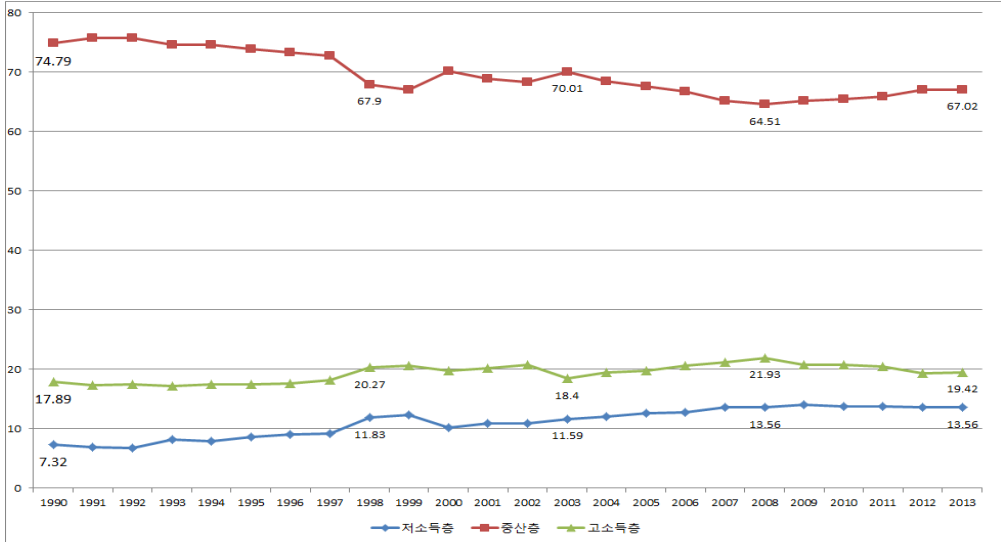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중산층 규모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표 1>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1990년부터 2013년까지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저소득/중산층/고소득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정의한 중산층 비중은 199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오다가 2008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듯 보인다. 외환 위기가 발생한 1997년 즈음에 중산층 비중이 급락했고 이후 다시 회복하는 듯했지만 2003년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하향 추세를 지속하다가 2008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중산층 비중의 감소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중의 증가를 동시에 동반하고 있어 양극화가 진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규모가 동시에 증가해 왔지만, 저소득층 증가의 속도가 고소득층 증가의 속도보다 미약하게나마 빨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중산층 규모의 증가는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고소득층 규모의 감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층 비중은 2008년과 2013년 사이 13.56%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지만 고소득층 규모는 2008년 21.93%에서 2013년 19.42%로 감소했다.

위에 제시한 중산층 규모의 추세는 도시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산층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1인 가구 증가라는 가구구성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1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2006~2013년 사이 증가하였고, 중산층(12.15% → 13.62%)과 고소득층(9.15% → 10.97%)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35.31% → 47.69%).

[그림 2]에 의하면, 1인 가구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중산층 규모는 2008년 이후 중산층 비중이 안정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인 시장소득 기준으로, 도시 2인 이상 가구나 전체 가구 표본 모

[그림 1]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 계층 분포(도시 2인 이상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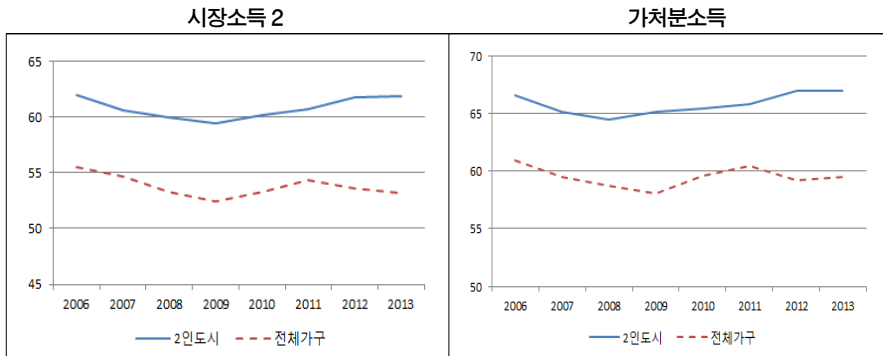
(단위 : %)



주: 중산층: 중위소득 50~15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두 2009년부터 중산층 비중이 증가했지만, 2011년에 전체 가구 표본의 중산층 비중은 감소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아도 전체 가구 표본의 중산층 비중은 2011년부터 감소 내지는 정체 상태이다. 물론 2000년 후반 이후의 중산층 비중이 저점을 기록한 2008~2009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다. 2010년대 들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산층 비중의 확대 혹은 정체 현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가구구성의 변화와 관련지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좀 더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2] 도시 2인 이상 가구 vs. 1인 가구 포함 중산층 규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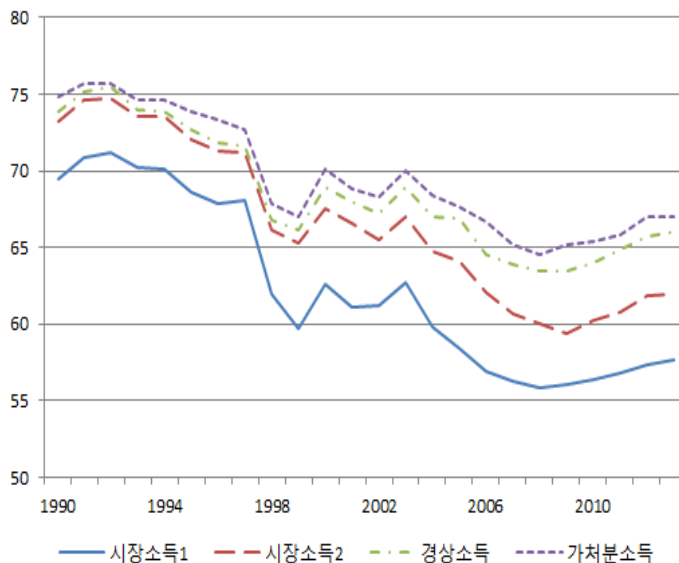
주: 중산층: 중위소득 50~15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IV. 재분배 정책의 중산층 규모 효과

소득재분배 정책 개입 이전과 이후 중산층 규모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살펴보자. [그림 3]에서는 중산층의 정의를 중위소득의 50~150%로 하고 소득재분배 정책이 중산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산층 규모가 커지는 것은 재분배 정책의 개입이 중산층 비중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부터 재분배 정책이 중산층 규모를 지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소득 기준 중산층 규모와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규모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재분배 정책의 중산층 증가 효과가 지속적으로 커져 왔음을 시사한다.

재분배 정책 가운데서도 공적이전소득의 혜택이 중간층 규모를 확대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한 반면, 조세와 사회보험료 납부 등 공적 비소비지출은 중간층 규모 증가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다. 경상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과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의 격차는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적이전소득의 역할보다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외환 위기 이전 시기와 대조되고

[그림 3] 재분배 이전과 이후의 중산층 규모 변화 추이(2인 도시가구)



주: 중산층: 중위소득 50~15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산층 규모 확대에서 사적이전소득의 역할이 공적이전소득의 역할만큼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공적이전소득의 역할이 커지면서 상대적 역할 비중은 낮아졌으나 절대적인 수준에서 중산층 규모를 유지하는 데 여전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재분배 정책이 계층 간 이동과 중산층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Mahler et al.(2013)의 방법론을 통해 살펴보자. 재분배 개입 이전과 이후의 계층 및 소득분위 이동을 매트릭스로 구성하여, 재분배 정책이 소득분위 간 이동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중산층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중산층을 중위소득 기준 50~150%로 정의하여 계층 간 이동, 그리고 중산층 내부의 이동을 살펴보았다. 국제비교를 위해 소득분포를 5분위로 나누어 계층 간 이동을 분석한 결과도 제시하였다.

<표 1>을 보면,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계층의 이동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가구는 2013년 현재 86.79%이다. 1990년 이후 재분배 정책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재분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 이동 형태는 저소득층에서 중간층으로의 이동이며, 그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형태는 고소득층에서 중간층으로의 이동이다. 2001년까지만 해도 고소득층에서 중간층으로의 하향 이동(2.08%)이 저소득층에서 중간층으로의 상향 이동(1.65%)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0년대 공적 부조 프로그램의 확대로 인해 저소득층에서 중간층으로의 상향 이동층이 재분배 효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간층에서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존재하는데, 2013년 현재 중간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이동(0.54%)보다는 중간층에서 고소득층으로의 이동(0.99%) 비중이 높다.

그렇다면 재분배 정책이 중산층 내부의 이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중산층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중산층 내부의 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50~100%와 100~150%로 나누어 하향 이동하는 집단과 상향 이동하는 집단을 구분하였다. <표 1>에 따르면, 중산층 내부에서의 이동은 상향 이동보다 하향 이동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위중산층으로의 이동은 1990년 1.11%에서 2013년 3.04%로 증가한 반면, 중위소득에서 상위중산층으로의 이동은 1990년 0.80%에서 2013년 2.01%로 증가하였다. 즉 1990~2013년 동안 재분배 정책은 중위소득 100~150%인 상위중산층으로의 상향 이동보다는 중위소득 50~100% 하위중산층으로의 하향 이동을 더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재분배 정책을 통한 중산층 내부의 하향 이동은 사실상 고소득층 중산층 이동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재분배 정책이 고소득층보다는 상위중산층을 대상으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1인 가구를 포함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분배 정책의 계층 이동 효과도 도시 2인 이상 가구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7년 이후 재분배를 통해 중산층 순증가분이 커지고 있지만, 2011년부터 순중산층의 크기가 감소하다가 2013년에 다시 커지고 있다.

〈표 1〉 재분배를 통한 계층 이동 매트릭스(중위소득 50~150%)

		도시 2인 가구							전체 가구								
		변화 없음	저→ 중	고→ 중	중→ 저	중→ 고	중산층 내부: 하향	중산층 내부: 상향	순중 산층	변화 없음	저→ 중	고→ 중	중→ 저	중→ 고	중산층 내부: 하향	중산층 내부: 상향	순중 산층
시장 소득 2→ 가처분 소득	1990	95.01	0.90	1.41	0.18	0.59	1.11	0.80	1.54								
	1991	95.09	1.03	1.02	0.27	0.66	1.11	0.82	1.12								
	1992	94.96	0.96	0.88	0.07	0.77	1.30	1.06	1.00								
	1993	94.47	0.87	1.20	0.20	0.78	1.34	1.14	1.09								
	1994	95.08	0.77	1.02	0.21	0.52	1.31	1.10	1.06								
	1995	94.05	0.77	1.73	0.16	0.60	1.53	1.16	1.74								
	1996	93.08	1.06	2.07	0.22	0.87	1.53	1.18	2.04								
	1997	93.51	0.88	1.75	0.25	0.93	1.52	1.17	1.45								
	1998	93.21	1.07	1.93	0.44	0.81	1.49	1.05	1.75								
	1999	92.95	1.33	1.80	0.54	0.80	1.62	0.96	1.79								
	2000	92.27	1.77	1.98	0.28	0.79	1.72	1.21	2.68								
	2001	91.55	1.64	2.08	0.45	0.95	1.87	1.46	2.32								
	2002	91.57	2.25	2.03	0.61	0.82	1.54	1.17	2.85								
	2003	91.31	2.38	1.89	0.50	0.73	1.81	1.38	3.04								
	2004	91.25	2.50	2.15	0.44	0.58	1.79	1.28	3.63								
	2005	90.79	2.68	1.93	0.38	0.67	2.01	1.55	3.56								
	2006	88.97	3.05	3.01	0.48	0.96	2.06	1.46	4.62	89.15	3.85	2.69	0.40	0.75	2.02	1.15	5.39
	2007	88.23	3.52	2.71	0.62	1.06	2.32	1.54	4.55	88.37	3.69	2.83	0.70	1.00	2.23	1.17	4.82
	2008	88.97	3.29	2.79	0.67	0.89	2.15	1.25	4.52	87.74	4.03	3.09	0.70	0.91	2.29	1.24	5.51
	2009	87.07	4.00	3.16	0.62	0.76	2.67	1.73	5.78	86.93	4.06	3.15	0.66	0.88	2.68	1.62	5.67
2010	87.10	4.12	2.69	0.73	0.87	2.75	1.75	5.21	86.25	4.80	2.98	0.58	0.88	2.79	1.73	6.32	
2011	86.95	4.00	2.61	0.54	1.00	2.97	1.92	5.07	86.35	4.61	3.06	0.56	0.94	2.82	1.66	6.17	
2012	86.84	3.78	3.18	0.65	1.09	2.76	1.71	5.22	87.17	4.11	3.01	0.52	0.98	2.69	1.53	5.62	
2013	86.79	3.99	2.64	0.54	0.99	3.04	2.01	5.10	85.87	4.64	3.52	0.70	1.06	2.71	1.49	6.4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이러한 변동에는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이동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재분배를 통한 소득분위 이동 매트릭스 국제 비교

	변화 없음	저 → 중	고 → 중	중 → 저	중 → 고	중산층 내부 : 하향이동	중산층 내부 : 상향이동	순 중산층
호주(2004)	78.3	5.2	1.4	3.9	1.2	5.2	3.9	1.4
벨기에(2000)	50.8	12.6	4.4	7.5	3.9	13.2	7.0	5.6
캐나다(2004)	68.4	7.3	2.0	5.0	2.0	7.5	7.7	2.2
덴마크(2001)	60.3	7.2	3.5	6.7	2.7	12.0	7.1	1.3
핀란드(2003)	62.6	5.3	3.4	6.6	3.7	10.9	7.4	-1.5
프랑스(2004)	51.9	11.3	4.2	8.5	2.9	15.0	4.6	4.1
독일(2004)	51.2	10.0	4.5	8.8	3.7	15.3	5.9	2.0
아일랜드(2002)	62.3	9.9	2.6	5.8	3.3	7.5	8.4	3.4
네덜란드(2002)	56.0	10.8	3.4	6.4	3.6	11.7	7.5	4.2
노르웨이(2001)	61.5	5.8	3.5	5.7	3.6	11.3	8.5	0.1
스웨덴(2002)	48.3	8.4	4.7	11.9	4.4	13.0	8.9	-3.2
스위스(2003)	61.2	10.2	2.8	6.8	2.6	10.6	5.0	3.6
영국(2001)	64.0	8.6	2.5	5.9	2.3	8.5	8.1	3.0
미국(2004)	70.8	6.8	1.9	4.5	2.1	7.5	6.2	2.1
평균	60.5	8.5	3.2	6.7	3.0	10.7	6.9	2.0
표준편차	8.5	2.3	1.0	2.0	0.9	3.0	1.5	2.4
한국(2006)	85.53	2.36	1.58	2.48	1.45	4.32	2.28	0.01

주 : Mahler et al.(2013 : 152)의 table 5.2를 인용함.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Mahler et al.(2013)이 L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 2>는 이러한 재분배가 소득분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간 비교 결과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산층은 소득분포를 5등분한 후 가운데 2,3,4분위로 정의한다.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순중산층 규모가 감소한 국가인 핀란드와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재분배를 통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순중산층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순중산층 규모가 감소한 것은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상향 이동하는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프랑스, 독일, 벨기에와 더불어 중산층 내부에서 하향 이동의 비중이 높았고(13.0%), 고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이동(4.7%) 비중도 높았다. 스웨덴의 경우 소득분배 개선은 전 소득분위에서의 광범위한 재분배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순중산층 규모의 확대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기도 한다. 한편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재분배 정책을 통해 각각 5.6%, 4.1%, 4.2%의 중산층 순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상향 이동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하는 비중이 그보다 크지는 않다는 점에서 스웨덴과 구별된다. Dallinger(2011)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과 같은 대륙 유럽 국가는 저소득계층과 하위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을 높여 복지국가의 ‘친-빈곤 경향(pro-poor pattern)’을 보인 반면, 스웨덴 같은 사민주의 복지국가 레짐은 친-빈곤 경향과 함께 상위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을 동시에 높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분배 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분석 결과 한국은 정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한 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비교 대상 국가들과 자료의 시점이 비슷한 2006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재분배를 통해 소득분위에 변동이 없었던 가구의 비중은 85.5%로 전 국가 평균인 60.5%보다 훨씬 높으며, 실제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재분배 정책에 의해 소득분위의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비중이 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정책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이전을 통한 재분배 정책의 역할이 더 커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간의 분위 이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하는 가구의 비중(2.36%)은 국가들 평균 8.5%의 약 27%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벨기에, 독일, 프랑스 등 친-저소득층 중심의 재분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의 재분배 효과에 비하면 여전히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하는 것은 전체 국가 평균(6.7%)의 37% 수준으로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하향 이동하는 것을 막는 재분배 장치의 기능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함을 보여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순중산층 비중은 다른 국가 평균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0.01%밖에 되지 않았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1990~2013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중산층 규모의 변화추이와 재분배 정책의 중산층 규모 효과를 분석했다. 1990~2013년 기간 동안의 중산층은 199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오다가 200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비중이 급락했고 2000년대 들어 다시 회복했지만 하향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다가 2008년 이후 다소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중산층 비중은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일관된 추이를 보이지 않아 추세에 대한 좀 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재분배 정책을 통한 중산층 확대 효과는 지속적으로 커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재분배 효과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여 중산층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부터 공적이전 수단의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한 규모의 가구가 중간층에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더 컸다. 이는 저소득층 계층에서의 재분배 효과가 실질적으로 중산층으로의 안정적인 이동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중산층 제고 효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의 재분배 개입 이전과 이후 계층 간 이동 이후 나타나는 순중산층 비중은 다른 국가 평균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0.01%밖에 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득재분배 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빈곤층에 대한 공적이전 효과가 과거보다 더 커졌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기반으로 친-저소득층 중심의 재분배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위중산층에 대한 공적이전이나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이들의 저소득층 하향 이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윤자영 · 윤정향 · 최민식 · 김수현 · 임재만 · 김영순 · 여유진(2015), 『중산층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2012), 『다양한 층위의 소득정의와 구성요소에 따른 불평등 수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동향과 전망』 제85호, 박영률출판사.
- Dallinger, Ursula(2011), “The Endangered Middle Clas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le Public Redistribution Plays,” LIS Working Paper Series 565.
- Mahler, Vincent A., David K. Jesuit, and Piotr R. Paradowski(2013), “Political Sources of Government Redistribution in High-Income Countries,” in Janet C. Gornick and Markus Jantti, *Income Inequality: Economic Disparities and the Middle Class in Affluent Countr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pp.145~172.